

제11대 도의회 상임위원장 선출

행자위 - 국주영은 의원
 환복위 - 최찬욱 의원
 농산경 - 강용구 의원
 문건위 - 정호윤 의원
 교육위 - 최영규 의원



국주영은 의원 최찬욱 의원 강용구 의원 정호윤 의원 최영규 의원

증했지만 관광 객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문재인 정부의 지원을

전북도의회(의장 송승환)는 3일 제 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에 국주영은 의원(전주9), 환경복지위원회에 최찬욱 의원(전주10), 농산업경제위원회에 강용구 의원(남원2),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 정호윤 의원(전주1), 교육위원회에 최영규 의원(익산4)이다.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회장은 "전북의 비전을 제시하고 도정의 핵심인 예산과 인사, 조직, 기획, 감사, 소방

등 주요기관을 관장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행정자치위원회"라며 "행정이 소통하고 도민이 참여해야 하는 만큼 충실하게 도민과 의회의 대변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찬욱 환경복지위원회장은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과 세대별 맞춤형 시책으로 도민의 행복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보건의료서비스와 도민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깨끗한 전라북도를 만드는 위원회의 역할 정립에 앞장서겠다"며 "아울러 새만금 세계 캠퍼리 성공 개최, 속도감 있는 새만금 핵심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

겠다"고 약속했다.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전북의 농업과 경제 분야에 대해 제대로 경제·감시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며 "지난 4년, 짧은 패기와 뜨거운 열정으로 성실하고 묵묵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십분 발휘해 전라북도 농업·농촌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정호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장은 "최근 2년 새 전북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2,900만 명에서 3,700만 명으로 급

이끌어내는 등 전북발전의 새로운 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규 교육위원회장은 "도내 학생들의 성장과 전복교육 발전·혁신을 위해 타 시·도의 좋은 정책 등을 벤치마킹해 우리지역 교육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도교육청과 상호관계 형성으로 교육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은 4일 제354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장 선출과 운영위원회를 구성 한 뒤 마무리된다. /김진성 기자

“전북교육 발전에 무거운 책임감 느껴”

도의회 최영규 교육위원장… 교육위, 김희수 의원 등 7명 구성

전라북도의회 11대 개원과 함께 구성된 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최영규 의원(익산4)의원이 선출됐다. 3일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에 선출

된 최영규 의원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저한 현장중심 의정활동과 함께 의원·소속 직원 간 팀플레이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상임위 운영방침을 밝히며 현장중심 '발로 뛰며 소통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행정과 정책에 반영하는 '책임과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자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지난 10대 교육위원회 의원 경험을 살려 소속 의원님들의

상임위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자료제공과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1대 전반기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최영규 위원장을 비롯해 김희수(전주6), 김명지(전주8), 김종식(군산2), 최현열(부안), 박희자(비례), 진형석(비례)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김진성 기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격려사하고 있다.

평화·정의 “‘개혁입법연대’ 신속 구성해야” | “국민이 준 과제 수행 계기 돼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3일 '개혁입법연대'의 신속한 구성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이제 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평화당의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지원·유성엽·박주현·최경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광수 의원도 함께했다.

조배숙 대표는 "촛불 혁명 대신 과정에서 국민이 우리 사회에 기대하는 바가 컸지만, 모든 과제를 담당해야 할 국회는 구조적인 한계로 쟁쟁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개혁입법연대가 국민이 우리에게 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수행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불어치고 있는데 국회는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적폐들을 입법으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 긴급좌담회에 참석한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뒷받침해서 속도감 있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전혀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당제 체제에서는 연대가 필수적인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개혁입법연대로 뭉쳐서 속도감 있게 입법을 해내야 하는 게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문제, 적폐청산은 완전히 성공했지만 개혁, 민생경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가 후반으로 가면 개혁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유성엽 의원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대화와 협상에 의해 국회를 이끌어가며 실적을 내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생산적인 국회가 돼서 민생법안이나 규제개혁법안 등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혁입법연대가 필요하다"고 목적을 높였다.

최경환 의원은 "개혁입법연대를 통해 국회 관련 개혁 벨트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개혁 벨트를 통

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견인해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도 "개혁입법연대에 동의하는 평화당을 비롯해 정의당, 민주당, 다른 당에서도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문호를 개방하고 답을 넘어서서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개혁입법연대를 빠르게 결성하고 시민사회와 어떤 공동과제를 설정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시스

검찰, 양승태 사법권 남용 추가자료 받는다

“주중 절차 진행 논의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중 법원행정처로부터 추가 자료를 넘겨받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추가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고,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곧 자료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라며 "가급적 주중에 자료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행정처 관계자들과 이야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행정처에 특별조사단 조사 문건 410건 원본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 컴퓨터 하드

디스크, 법인카드 내역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행정처는 개

인정보 등을 이유로 410건 문건만 검토에 제출했다.

검찰은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행정처에 전달했고 관련 논의가 이었다. 또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의혹이 커진 양승태 사법부의 하청주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및 협회 압박 사건과 관련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법관 사찰 문건 존재 의혹이 불거진 출발점으로 거론되는 이탄희 판사 등 현직 판사 410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기초 조사도 이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향후 원활한 수사를 위해 비공개 조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행정처가 추가 제출하는 자료를 먼저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앞서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던 사건 관련자들의 공용 이메일과 공용폰 기록, 법인카드 내역,

관용차 운행일지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여서 강제 수사 등이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렸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측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 입장을 밝혔고 우리는 그 입장을 존중하기 때문에 끈기 있게 임의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게 이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처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관련해서는 검찰 관계자가 행정처를 직접 방문해 하드디스크를 통제로 복제(이미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법의 경우 하드디스크 원본을 확보한 것과 사실상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대상 이 법을 전문가로 각자 보

장된 방어권 최대 행사할

것으로 보여 자발적인 협조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집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향을 시도해서 증거 확보한 후 그에 더 잡아 결론 내야 당사자나 국민들이 수사결과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 전 회장 사건 수사를 두고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목과할 수 없는 범죄 단서가 나오면 수사해야 하는 것이 수사 기관 의무"라며 수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퇴임후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국회 영향력을 과시하며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과 범위는 시작 전에 말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뉴시스

민주당, 원내기구로 '민생평화상황실' 가동

더불어민주당은 3일 민생현장 점검과 한반도 평화 뒷받침을 위해 '민생평화상황실'을 원내기구로 가동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민생평화상황실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생평화상황실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남북경제협력 등 4개 팀으로 구성됐다. 총 52명의 의원이 참여하며 각각 한영애·김종민(소득주도성장팀), 홍의락·이기구(혁신성장팀), 이하영·권철승(공정경제팀), 김경협·권미혁(남북경제협력팀)이 팀장과 간사는 맡는다.

소득주도성장팀은 복지 확대, 확장 재정정책 추진,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소득확대를 위한 현안 점검 및 입법을 추진한다. 혁신성장팀은 혁신성장 과제 연구 및 우수사례 발굴, 입법화를 지원한다.

공정경제팀은 을지로위원회와 연계해 불공정 민생현장 방문 및 민원 해결, 민생법안 입법을 담당한다. 남북경제협력팀은 남북경제협력사업 재개 및 확대를 위한 입법 및 예산상황 연구를 맡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가 휴업이지만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것을 방지할 수 없다"며 "민생평화상황실을 본격 가동한다.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고 민생현장을 챙기겠다는 우리 당 의원들의 의지를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혁신 비대위 대국민 공모 착수

후보 5~6명 확정... 8일 마감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는 3일 비대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대국민 공모를 시작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당 홈페이지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대국민 공모 및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게시글을 올리고 공모 절차를 착수했다.

인상수 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3차 준비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주말까지 인터넷 등을 통한 국민 공모를 실시해 그 의견까지 고려해 후보 5~6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공모는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둘로 나뉘 진행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또 자천과 타천 모두 가능하다.

안 위원장은 이와 관련 뉴시스와 통화에서 "자천타천으로 공모를 받고 비대위원장으로 추천되면 그 분도 심사대상"이라며 "유의미한 분이 추천되면 (심사에)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의 경우 ▲경제 ▲외교·안보 ▲노동 ▲복지 ▲청년(20~30대) ▲교육(보육) ▲학부모 ▲여성 ▲언론 등 9가지로 나뉘 지원할 수 있다. 모집은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뉴시스